
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

2026. 8. 5.

I. 상반기 주요 성과

1 2028-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추진

□ AI시대교육, 민주시민교육 등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발전계획과 연계

- 전 생애, 모든 분야로 인재 개념을 넓히고, AI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해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 방향 정립

특별위원회	주요 활동 결과
인재강국	✓ 국민 개개인의 전 생애적 역량 성장을 중시하는 인재개념 정립 및 실행방안 제안
AI시대교육	✓ AI시대 핵심 역량·교육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(43,812명 응답) 결과와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'AI시대 교육정책 전환 방향' 제안 ※ 6월 대국민 토론회 실시
인문사회	✓ 지속가능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 및 교육·연구 발전방안 제안

- 생애 전 단계의 학습을 뒷받침하는 교육체제 개편 과제 논의

특별위원회	주요 활동 결과
영유아교육	✓ 국가책임형 포용적 영유아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
고교교육	✓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 제안
대학입학제도	✓ 공정성 확보, 수업·학습 혁신 촉진, 공교육 중심성 회복에 중점을 둔 대입제도 검토
고등교육	✓ 4대 분야(경쟁력 강화, 지역동반성장, 공유·협력, 재정 등) 발전전략 제시

- 학교현장의 갈등을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하고, 상호 신뢰와 민주적 문화를 갖춘 학교공동체 조성

특별위원회	주요 활동 결과
학교공동체회복	✓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한 개선 과제 제안
민주시민교육	✓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및 교육활동상의 기본원칙을 담은 '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(안)' 마련 ※ 7월 대국민 토론회 실시 예정

-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AI시대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온·오프라인 대국민 토론회, 집중의견수렴 추진('26.6.)

〈 주요 우수사례 〉 - 국가교육위원회가 묻고 국민이 답하다

- ▶ 국가교육위원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고, 그 결과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
 - AI시대의 학습과 학교교육 등에 대해 학생, 학부모, 교사, 국민 335명이 토론하고 (6.18.~6.20.), 온라인을 통해서도 폭넓게 의견 수렴(2,739건 접수, 6.22.~7.10.)
- ▶ 국가교육위원회의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일 저녁과 주말 활동을 적극 운영(참여율 : 1기 32% → 2기 62.7%)

2 현장적합성을 고려한 국가교육과정 마련

□ 국가·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

- 고교학점제 ‘학점 이수 기준’ 관련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현장 혼란 최소화 및 초·중 1~2학년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‘건강한 생활’ 교과 신설('26.1.)

□ 현장 전문성에 기반한 국가교육과정 운영

- 현장 의견의 국가교육과정 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‘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’을 개편*하고, ‘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·점검’ 대상 학년·교과 확대

* 단원 증원(200명→323명), 임기 확대(1년→2년), 온·오프라인 협의 확대 등

3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추진 기반 조성

□ 국가교육위원회 지속적 개혁, 의사결정 투명성과 국민 접근성 제고

-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여,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「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」을 정비*('26.2., '26.5.)

* △속기 형태의 회의록 공개, △언론 중계, △일반국민 방청, △소속 위원 기준 강화 등

- 「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여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요청을 위한 국민 동의 요건 완화*('26.6.30.)

* (기존) 정책제안 후 90일 이내 동의 인원 10만 명 이상 → (개정) 5만 명 이상

□ 국민과의 교육정책 소통·논의 체계 구축

- 학생, 학부모, 교육관계자 등 국민 500명으로 구성*된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상시 수렴 기반을 마련(2기, '26.4.~)

* 미래세대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학생·청년 위원 비중 확대(1기 16% → 2기 30.2%)

II. 핵심 추진과제

1 개혁 과제

국민과 함께하는 2028-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

- ‘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, 새로운 교육국가’를 비전으로 제안

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, 새로운 교육국가

중심이 바로 선 주체적 인간

스스로 문제를 찾고
해결하는 창의적 학습자

인류 공영에 기여하고
세계를 이끄는 시민

창의적 구성학습

열린 학습 체제

- 개개인의 학습권 보장을 국가의 공적 책임으로 삼고, 스스로 배우려는 활력을 지원하여 발전의 자산으로 삼는 ‘새로운 교육국가’ 구축
-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

< 새로운 교육국가의 학습원리와 학습체제 >

- ▶ (학습원리) 학습자가 인공지능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고 지식을 새롭게 연결·재해석함으로써 온전한 삶에 이르도록 하는 학습원리
- ▶ (학습체제) 학습의 공간이 학교를 넘어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학습의 시간이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체제

- 다양한 전문가 기구와 현장의 논의를 거쳐 주요 추진과제 마련

< 현장 목소리(대국민 토론회, '26.6.) >

- ▶ (AI시대 인간의 고유한 역량) “AI가 계산과 검색은 잘하지만, 그 이상의 오류를 잡아내고 고차원적인 생각이나 새로운 창작을 하는 고도의 사유는 인간만이 가능하다.” [고등학생]
- ▶ (AI시대 학교 교육) “30년 전과 똑같은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. 지식 습득보다 실질적 역량을 키우는 ‘역량 중심 교육’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.” [교사]
- ▶ (AI시대 배움이 직업으로 이어지는 교육체제) “특정 대학 타이틀보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 특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. 원하는 수업을 골라 짧게 이수하는 마이크로 학위 형태로 대학 구조가 변해야 한다.” [대학관계자]

- 모든 학습자의 배움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체제 구축
 - 영유아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책임지는 교육·돌봄 체계 조성
 - AI시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학생의 기초역량 보장 지원
 - 대학 자율성과 국가의 질 관리·재정투자 확대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, 모든 학습자의 생애 학습과 유연한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기반 구축
- 교육과정·교수학습·평가·대입제도에 이르는 교육 전반 혁신
 - AI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-수업-평가 연계 시스템 구축
 - ※ AI평가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교·교사 간 평가의 편차를 극복하고 공정성 확보
 - 수업과 학습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서·논술형 평가 확대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
- 상호 신뢰를 통해 학교 공동체 회복
 - 교권침해·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고,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교폭력 등 갈등 상황에 대응
 -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해 「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(안)」 수립·시행

<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(안) 주요 내용 >

- ▶ **(학교시민교육의 정의)**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질서에 기초하여, 학생이 공공 문제를 사실과 근거에 따라 이해하고 판단하며, 다원성과 절차를 존중하고, 공동체의 공적 삶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
- ▶ **(총강)** 정의, 적용 범위,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,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
- ▶ **(기본내용)** 헌법의 가치와 원리,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, 혐오·차별·극단주의의 배격 등
- ▶ **(교육활동상 원칙)** 명확성과 논쟁성의 원칙, 시의성의 원칙, 안전성의 원칙 등

□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발전계획 수립

- 발전계획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, 온라인 의견수렴과 현장 토론회(월 1회 이상) 등을 실시하여 시안 마련(~'26.10.)
 - 교육정책에 관한 총괄 조정·협력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, 교육부, 시·도교육청, 대학 등을 포함한 「(가칭)국가교육협의회」 운영

- 시안에 대해 대국민 공청회(온·오프라인), 공개포럼 등 실시('26.10.~11.)
 - 10월 말 시안 대국민 공개 후, 11월 초 온라인 공청회 실시(10일간)
 -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가·교육주체 등이 토의하는 포럼 추진
- 대입제도 등 교육 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과제는 대국민 숙의·공론화 등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발전계획 확정(~'27.3.)

<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공론화 추진 >

- ▶ (목적) △수업·학습 혁신 촉진, △공정성 확보, △공교육 중심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입제도 방향 설정

<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>

- ▶ (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여부) 수업과 학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·고교 서·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·논술형 평가 도입을 검토
- ▶ (절대평가 전환 여부) 급우 간의 극심한 경쟁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 검토
- ▶ (대입전형시기 조정 여부) 고교 3학년 2학기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입전형 시기 조정을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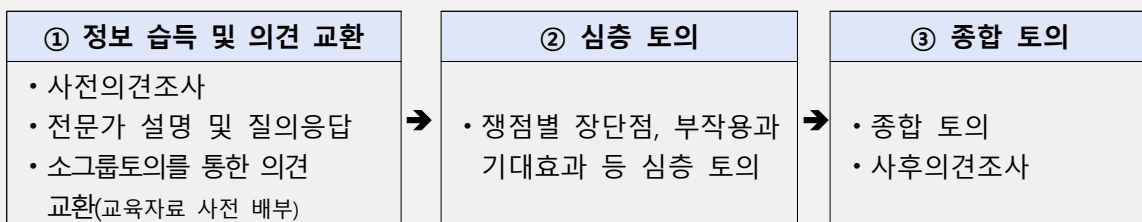
- ▶ (공론화) 대입특위 주요 검토사항 중심으로 대국민 숙의·공론화 진행

① 현장 토론회

- 미래 사회를 위한 대입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지역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

②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

- 국가교육위원회의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참여위원회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정보 제공과 의제 교육, 심층 토의 등을 진행



③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

- 국가교육위원회 '국민의견플랫폼(www.ne.go.kr/platform)' 내 대입 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대입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의 장 운영

④ 국민 공론조사

- 추가적인 의견수렴 필요 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참여단을 구성하고, 충분한 정보 습득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도출하는 공론조사 실시

2 역점 과제

①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(국정 99-1, 100-1, 100-2)

□ 전인적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

-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연계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체제 연구 및 개선방향 모색('26.4분기~)
- 인공지능시대 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내 AI교육 내실화 및 AI·SW 기초 교육 등 학교 전반에 걸친 보편적 AI교육 강화
-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,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 선택과목*을 신설하여 미래세대 민주시민 역량 강화('26.7월~)

* 역사 및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분석·비평하며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융합 성격의 과목

□ 현장 소통 기반의 국가교육과정 현황 진단 및 과제 발굴

〈 현장 목소리 〉

- ▶ EBS 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나, 요즘에는 학생들의 교과 개념어 이해가 부족해 타 과목 강의에도 참여하여 먼저 개념어를 설명하고, 본 강의를 시작해야 함 [특별위원회 위원]
- ▶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어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졌으나, 지역·학교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필요 [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학부모팀]
- ▶ 기초학력 보장, 실습 중심 운영, 자격증 취득 등 일반고와는 다른 직업계고 상황을 반영한 교육과정 검토 필요 [전문계열 교원/2025 국가교육과정 조사·분석·점검 면담결과]

- 기초 문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*를 발굴(문해력 특위 등)하고 국가 교육과정 연계 등 정책화 검토

* (예시) 교육과정·교과서 연계, 어휘 교육 방안, 한자교육 확대 여부 등 검토

-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 등을 토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실태, 미래 교육 등에 대한 「2026 국가교육과정 조사·분석·점검」 추진

※ 미래 학교 교육과정 발전 방안,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방안 등 학생, 학부모, 교육전문가가 함께하는 국가교육과정 포럼 개최('26.하반기, 2회)

- 직업분야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신설을 추진하여 AI 대전환 등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와 산업수요와 연계한 교육과정 기반 마련

② 교육 정책에 대한 숙의·조정 활성화(국정 102-4)

□ 숙의·공론 확대를 통한 교육문제 해법 모색

- 국민참여위원회와 지역의 시민참여기구가 함께 숙의하여 국가의 교육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지역의 교육문제 청취(지속)

※ AI시대의 학습, 학교교육, 교육체제 토의(6월, 서울교육청 협업) → 학교시민교육 원칙 토의(7월, 부산교육청 협업) → 중요정책·현안 토의 추진 예정(8월~, 인천, 전남·광주교육청 등)

- 공론화·숙의 결과 등 국가교육위원회 연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는 대국민 보고회 개최('26.12.)

□ 국민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

- 주요 교육의제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·운영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대상 의제*를 지속 발굴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강화

* (예시) 사교육 특별위원회에서 과도한 선행 사교육 등 사교육 문제에 관한 대안 마련

- 국민의견 수렴·조정 법정 기준(5만 명 이상 동의) 미달 시에도 국민 관심이 높은 의제*는 전문위원회가 내용 검토 후 본위원회에 의견수렴 제안 추진

*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과제 중 일정 수(예: 1만 명) 이상 국민 동의 도달 건

<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개요 >

- ▶ (요건) ① 국회,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 ② 홈페이지(국민의견플랫폼)에 90일 이내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 ③ 국가교육위원회 재적위원 1/3이상의 발의
- ▶ (절차)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절차 진행 여부 심의·의결(45일 이내) → 절차 진행 및 처리결과 통보(요청·관계기관) → 이행계획 제출(30일 이내, 관계기관)

